다산포럼

구조맹(構造盲)에서 벗어나자

김 동 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세월호 100일이 지났는데 골목상권은 아직 허덕, 중소기업 정상가동 39%뿐" 이런 제목이 작년 8월 4일 자 '조선일보'에 떴다. 온 나라가 세월호 문제에 매달려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경제가 어렵다는 느낌을 주는 내용이다. 그 직후 안산에서는 상인들이 세월호 현수막을 뜯어냈다. 그들은 장사가 안 되는 것이 세월호 정국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소비 위축이 세월호 정국 때문이 아니라는 것은 구구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양자 간의 상관관계를 은근히 암시하면서 유족의 목소리를 고립시키고 사건의 책임을 엉뚱한 데로 돌리는 언론 보도와 정치가들의 발언은 지난해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다.

나라를 흔드는 큰 사건에서부터 구체적인 사회경제 정책, 그리고 개인적 사건에 이르기까지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은 분명히 원인과 책임 소재가 있다. 그러나 사회에서 발생하는 일은 여러 가지 원인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보통사람들로서는 그 원인들의 경중을 일일이 따져 알기가 쉽지 않다.

정부나 기업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정부기관이나 법원이 증거들을 편향적으로 선택하면 아예 원인 규명이 불가능하게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삼성 반도체에 근무했던 20대 초반의 여성 노동자들 수십 명이 백혈병에 걸려 사망하거나 불구자가 되어도 삼성 반도체에 근무한 일과 그런 죽을 병을 짊어진 것과의 상관관계는 아직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고 삼성이나 정부, 법원은 제대로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명백하게 구조적인 이유로 발생한 사건이 있어도 언제나 특정 개인의 책임으로 귀결되어 버리고 만다는 것이다. 다수의 희생은 물론이고, 큰 사회경제적 위기가 발생해도 정권, 대기업 등 그 사건에 원인을 제공한 주체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을 극히 어렵게 만드는 힘이 도처에서 작동하고 있다.

지난 1997년 말 재벌들의 과다 차입으로 국가부도 사태를 맞았을 때 재벌개혁의 목소리와 경제 투명성 요구는 하늘을 찌를 듯했다. 그런데 '내 탓이오'라는 담론과 연이은 '금 모으기 운동'은 이 원인 규명, 책임자 처벌, 그리고 향후의 지속적인 대책 마련 움직임을 완전히 덮어 버렸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사람들은 정부가 명백한 책임을 갖고 있는 일을 겪어도 개인의 운수나 부주의로 탓을 돌리거나 사태를 엉뚱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요즘 인터넷에서 떠도는 '구조맹'이라는 단어가 이 현상을 잘 설명해 준다고 본다.

구조맹이란 사회 문제를 인과의 고리로 연결된 하나의 구조로 파악하지 못한 채, 사회를 언제나 개개인의 잘못이거나 지도자의 인격의 문제로 보는 태도를 말한다. 자연의 힘이 불가항력적이고, 왕의 의지가 결정적이던 전근대 시절에는 대다수 백성들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을 그냥 자연, 신, 군주의 뜻이라 해석하고 체념하고 순종하였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런 시대가 아닌데도 여전히 한국인들은 정치사회구조의 맥락에서 세상일을 보지 못한다.

구조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정치집단과 언론이 퍼트리는 '오염된' 언어와 뒤틀린 상황 해석을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고, 거기다 약간의 독서 습관만 있어도 누구나 구조맹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헤겔은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 앞에 바로 주어진 것에 대해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부정적 사고란 수치의 마술, 궤변, 속임수, 관심과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권력·언론의 공모 등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다.

교육과 학문의 목적도 바로 세상 일의 원리를 깨닫고 제대로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행동할 수 있는 시민을 기르는 데 있다. 시민들이 보다 책임 있는 존재가 되고, 사회적 재난에서 불의의 희생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문제를 구조의 맥락에서 보는 능력과 인과관계를 추론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OECD나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인의 대학 진학률은 세계 최상이지만 실질문맹률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라고 한다. 국민의 학력만 높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구조맹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학교 교육과 성인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이 좋은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고, 정치집단에게 사건의 책임을 물어서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 수 있다.

NGO 칼럼

지역을 바꾸는 작은 실험들, 공유·공감이 필요해

윤 현 석
(주)컬쳐네트워크 대표이사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도시가 변하고 있다. 정보 진화의 패러다임 속에 소셜네트워크(Social Network)를 활용한 1인 미디어는 정보의 공유를 넘어, 소통 방식의 속도는 더욱 빨리 변화하고 있다.

지금은 지속가능한 도시의 자생적인 발전을 얘기하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문화적 가치와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특히 지역의 문화적 자생력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 청년들의 움직임이 한층 활발해지고 있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활동 등이 청년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만들어져가고 있다. 과거 선배들의 문화적 활동 등이 운동성을 담보하고 사회 공동체적인 시각에서 시작되었다면, 새로이 등장한 청년예술인과 문화기획자의 모습은 자기욕구의 실현 및 사회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추어 진화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에 있어서 1인 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방법 등을 실험하고 이를 통해 자생적인 역량을 스스로 키워나가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지역에 문화적이고 창의적인 역할이 필요한 이때, 사회적 역할이나 개인의 창의적 활동을 통해 자신의 의지대로 사회라고 하는 시험대에서 역량을 펼쳐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창의적인 실험들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는 한계는 이러한 실험들을 과감하게 펼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다.

컬쳐네트워크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에서부터 출발한 사회적 기업이자 문화적 기업으로서 지역최초로 웹 기반의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마이밈' 과 지식공유 플랫폼 '라이프매뉴얼'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장소중심의 문화기획에서 벗어나 웹이라고 하는 환경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문화에 대한 고민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매개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떤 생각을 머릿속에서 그리는 것을 넘어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기반이 필요하다.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 표현할 설계와 이를 실현할 사람은 물론, 이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자본 마련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만약 내가 어떤 일을 하려한다면 기획부터 구상을 마친 후 함께 할 사람들을 모은 다음, 필요한 자본은 은행에서 차입하거나 투자자 혹은 후원자를 찾아 나서야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다. 생각을 실현하는 초기 과정에서 부족한 경제력과 기술적인 문제는 아이디어를 제대로 구현해내는 것을 어렵게 하고 그만큼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지원해 줄 사람도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은 기존의 이런 시스템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하였다. 만약 내가 실현하고 싶은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와 이를 실천할 계획을 인터넷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 올리면 된다. 그 다음 프로젝트 진행 경과에 대한 내용을 알리면서 다수의 대중에게 소액의 투자금을 모금한다. 따라서 크라우드 펀딩은 소액 투자비용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위험부담을 낮출 수 있고 프로젝트 진행 과정을 알리면서 실현되는 모습을 점점 더 잘 보여줄 수 있다. 또한 대중으로부터 지원받는 돈을 온라인을 통해 모금하니 투자자나 후원자를 직접 찾으려 다니지 않아도 된다.

크라우드 펀딩의 독특한 성격 때문에 크라우드 펀딩은 어떤 투자 수단이 아니라 투자와 기부의 중간 지점에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는 자본을 만드는 데 참여한다는 측면에서 투자라고 할 수 있지만, 그 투자에 따른 금전적 보상이 없거나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부로도 보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보기에는 손해인 이 펀드에 사람들이 참여하는 이유는 크라우드 펀딩에 투자하는 것은 수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응원하는 프로젝트의 실현을 통해서 '가치를 위한 투자', 혹은 '사회적 투자'를 만들어간다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지식의 절대적인 가치는 특별한 영역이자 역할로서 지배적인 의식의 구조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노하우, 지식, 배움, 경험이 밖으로 나오고 사람들과 함께 공유되고 공감되어 다양한 문화적 경험 등을 새로운 관계를 통해 확산하였을 때 문화적 가치가 만들어지고, 사회적 역할을 통해 삶에 대한 고민과 삶의 방식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 지역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고 문화적 장소,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문화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세상에 꺼내보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리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유하고 싶은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다면 우리 지역에서 이를 함께 고민하고 실현해나갈 파트너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시라. 내가 하는 일은 티끌일지 모르지만 뒤따를 일은 태산이라는 말로는 표현이 부족할 것이다.

기 고

독도 문제 해결을 위해 소프트파워 강화해야

이 진
광주시의회 운영전문위원

2015년 들어 대한민국 땅 독도를 침탈하려는 일본의 구체적 행동이 현실화되고 있다. 일본은 새해 벽두부터 "한국이 갑자기 독도를 점령해 지금은 일본인이 접근할 수 없다"는 억지 주장을 늘어놓은 17분짜리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1월 중순에는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명시한 '2014년 방위백서' 한글번역 요약본을 한국에 전달했다. 한국의 대응은 언제나처럼 늑장대응 그 자체였다. 아마도 일본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 제정 10주년을 맞아 독도 도발수위를 갈수록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독도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우선 독도문제의 본질을 살펴보자. 독도 문제의 본질은 한국과 일본 간의 정치적 갈등이다. 국제정치의 한 시각인 현실주의의 관점에서 보자면,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이 주는 안보상의 이득을 최대화하기 위해 한미일 3각 동맹을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행동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주의 시각은 한일 갈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한일관계에는 역사적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독도 문제는 일본 제국주의의 한국 침탈로부터 비롯된 과거사 문제와 결합되어 가장 중요한 갈등적 현안이 되었다. 독도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필요하다.

2013년 10월 1일에 열린 '제8회 파주북시티 국제 출판포럼'에서 하루키 동경대 명예교수는 "동북아 지역의 위기와 극복을 위한 방안"이라는 강연에서 동북아 영토 문제 해결 방안으로 다음의 3대 원칙을 제시했다. ①관련 조약, 협정, 선언, 공동 성명의 중시와 활용 ②섬의 현재 상황, 섬사람들의 삶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③섬과 주변해역, 해저자원의 처리에 있어서 관계국의 이해와 조화다.

기본적으로 해양영토문제는 유엔해양법협약의 테두리 안에서 다루어지도록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상호 이해와 협력의 정신에 입각하여 경계와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제공하지 않은 세부적인 법적 제도적 틀을 지역 차원에서 마련하는 일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합의하기 쉬운 영역에서부터 상호간 이해를 증진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중국과 아세안(ASEAN) 국가들이 합의한 남중국해상 행동강령(Code of Conduct for the South China Sea)과 같은 합의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제안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일본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해양국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세종연구소 이종석 수석연구원은 지금까지 조용한 외교에서 벗어나 다섯 개의 영역에서 전략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①독도 문제 본질의 명확한 확립 ②실사구시의 독도정책 지향 ③독도연구의 강화 및 선택적 집중 ④국제사회의 지지 확보 추구 ⑤일본 국민의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 등이다.

세 번째, 한국이 동아시아의 강대국 사이의 중개자로 나서야 한다. 중국의 G2부상은 아주 중요한 변수다. 중국이 부상함에 따라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안보협력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역학 관계 속에서 한국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중개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파워를 발휘해야 한다. 독자적으로 영토를 지키는 군사력을 확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군사력 행사에는 너무나 많은 장애요소와 변수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다자전략을 수립하여 독도문제를 정리하는 혜안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네 번째, 물리적 충돌이나 외교적 마찰의 경우에 대한 대응책이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제국의 노력과는 별도로 일본의 내적 요인에 의해서 독도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한다. 일본정부는 모르는 척하고 나타날 수 있는 일과성 도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범정부적 대응 체제를 구축하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

다섯 번째, 독도문제에 대해 한국과 북한의 공동대응도 필요하다. 만약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6·15 및 10·4 선언의 이행, 개성공단의 안정화, 금강산관광의 재개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여기에 독도에 대한 남북공동학술조사를 필두로 다양한 접근을 의제로 삼아야 한다. 독도문제를 공동의 과제로 상징화할 경우, 일본에 대한 효과적 압박수단으로 작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스탈린은 "교황 휘하에 몇 개의 사단이 있는가?"라고 조롱하듯이 바티칸을 비웃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바티칸은 여전히 막강한 소프트파워를 행사하고 있다. 독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키워야 할 것이다.

社 說

문화전당 특별법 오늘 반드시 통과돼야

국회에서 장기 표류 중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4일 상임위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정부 여당과 야당의 시각차가 확연하게 달라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국가기관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개정안에 맞서 새누리당과 정부는 국가소속기관으로 3~5년 한시 운영하고 이후 법인화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어서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지난 14일 "2월 임시국회에서 문화전당 특별법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다짐한 데 이어 2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법안 통과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윤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도 특별법 개정안을 상임위에 상정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과 막판 협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우리는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의 핵심인 특별법 개정안이 24일 전체회의에서 통과돼 최종적으로 법안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전체회의로 이날 처리되지 않으면 향후 임시국회에서도 처리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번 임시국회마저 특별법 통과가 물 건너 간다면 오는 9월로 예정된 아시아문화전당의 공식 개관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당장 개관 준비를 위한 인력과 콘텐츠를 확보해야 하지만 특별법 표류로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전당이 움직이려면 정규직 423명과 비정규직 200명 등 623명이 필수이나 현재 개발원의 인력은 200여 명에 불과하다. 이대로 가다간 '무늬만 아시아문화전당'으로 전락할 게 뻔하다.

정부 여당은 이제 더 이상 특별법 처리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선 안 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 주체를 법인화하겠다는 것은 국립을 떼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이다. 차별을 당하는 호남사람들도 한계에 와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혼탁 치닫는 조합장 선거 유권자가 막아라

조합장 선거가 치러지는 전남지역 179개 조합 중 무려 33개 조합이 수사를 받고 있다니 선관위가 관리해도 '돈 선거'는 결코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공명선거 실천결의는 왜 실종됐고 도대체 조합장 선거는 금품·향응 제공 없이 치를 수는 없는 것인지 실망스럽다.

22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다음달 11일 실시되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 전남지역 조합 33곳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농협이 27곳으로 가장 많고 축협과 수협이 3곳씩이다.

조합원에 대한 선심성 경비 지원, 기념품 제공을 넘어 100만 원 이상의 현금도 건네는 등 금품 관련이 대부분이다. 전남도선관위에 적발된 건수도 경고 36건, 수사의뢰 1건, 고발 8건 등으로 극심한 혼탁 양상이다.

'조합장 선거가 가장 타락한 선거'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선관위에 맡겨 치르는데도 이러한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것은 유권자인 조합원의 범죄의식 결여 때문이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금품을 받아온 관행에 죄의식이 무뎌져 있는 것이다.

조합장 선거는 특성상 유권자 수가 적고 대부분이 오랫동안 같은 지역에서 친인척, 선후배로 돈독하게 지낸 사이여서 적발하기 쉽지 않다. 최근 조합장 선거 제보로 1억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는데도 '포상금을 받으면 동네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다'며 거부한 사례에서 보듯, 금품수수를 알리면 배신자로 낙인찍힐까봐 나서지 못하는 환경이 가장 큰 문제다.

결국 공명선거는 유권자들의 각성에 달려있다. 돈을 받으면 패가망신하고 돈을 뿌리는 후보는 조합과 자신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경찰과 선관위, 각 조합중앙회도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감시에 나서야 한다. 첨단 수사기법을 이용, 아무리 은밀하게 금품이 오가도 들통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無 等 鼓

흑두루미의 날

"아무르강 소인이 찍힌 항공우편이 도착했다/ 우표 네 귀마다 고드름이 박혀있는 흑갈색 편지에는/ 온난화 현상도 이곳에선 세계 대백과사전에서나 읽어보는 호사라며/ 한낮에도 발가락을 날개 안쪽 깊이 파묻고 지낸다는 이야기였다…"

광주일보 2012년 신춘문예 시 부문 당선작 '귀화(歸化), 혹은 흑두루미의 귀환(歸還)'(정영희 작)의 일부분이다. 멀리 시베리아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 순천만을 찾은 흑두루미 무리의 모습이 연상되는 시구이다.

두루미는 '두루루'하고 운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두루미류 15종 가운데 흑두루미와 재두루미, 검은목두루미 등 3종이 매년 10월 말께 순천만을 찾아 겨울을 나고 이듬해 3월 고향으로 돌아간다. 인안뜰내 전봇대 292개를 뽑아내는 등 민·관의 노력 끝에 지난해 12월에는 흑두루미 966마리 등 두루미류 1005마리가 관찰돼 순천시는 '천학(千鶴)의 도시'라는 영예로운 이름을 얻었다.

지난 1월 초 순천시의 '겨울철새 새벽 탐조 프로그램'에 참여해 흑두루미 떼를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청둥오리 식당을 이전한 자리에 세워진 탐조대에서 고배율 필드스코프를 이용해 살펴본 흑두루미의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오전 7시 30분께 잠을 깬 흑두루미가 하나둘씩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오르자 탐조객들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탐조 프로그램을 마친 후 한 30대 부부는 "아이들과 함께 생태·환경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었다. 먹이 뿌려주기를 통해 아이들이 '내가 가진 것을 자연에 돌려주는' 나눔을 배우는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순천시 생태·환경단체 활동가들은 천연기념물 지정번호(제228호)에서 착안해 지난 2012년부터 2월 28일을 '흑두루미의 날'로 정했다. 전 세계적으로 1만2000여 마리에 불과한 흑두루미의 서식지 보호와 순천만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상징적인 '데이 마케팅'이라 할 수 있다.

'아무르강 소인이 찍힌' 우편 메신저인 희귀 철새 흑두루미를 통해 자연과 인간의 공존 의미를 되새겨본다.

/송기동 사회2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_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